

유럽 재정위기 현주소 진단 및 우리기업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약

I. 유럽 재정위기 현주소 / 1

- | | |
|---|-------------------------|
| 1 | 1. 유럽 재정위기 발생원인 및 진행 현황 |
| 2 | 2. 재정위기국의 주요 현안 이슈 |
| 5 | 3.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

II. 유로존 전망 및 예상 시나리오 / 8

- | | |
|----|----------------|
| 8 | 1. 재정위기 확대 가능성 |
| 10 | 2. 유로존 예상 시나리오 |

III. 위기 장기화에 따른 기업 대처 유형 / 13

- | | |
|----|------------------------|
| 14 | 1. 재무건전성 제고 |
| 15 | 2. 생산·유통관리 및 마케팅 전략 전환 |
| 16 | 3. 위기국 탈출 |
| 17 | 4. M&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 |

IV. 권역별 경기 전망 및 우리기업 진출 방안 / 19

- | | |
|----|------------------------|
| 19 | 1. 남유럽(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
| 22 | 2. 서유럽(독일, 프랑스, 영국) |
| 26 | 3. 동유럽(폴란드, 헝가리, 체코) |
| 29 | 4. 북유럽(덴마크, 핀란드) |

요 약

남유럽에서 시작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로존 차원의 대응책이 구축되면서 다소 진전되는 양상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지난 9.6일 유럽중앙은행의 전면적 통화정책(OMT) 도입을 시작으로,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과 유로존 시중은행 통합관리체제 출범 등 다양한 유럽 재정 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하였다.

더불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IMF와 유로그룹이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재개를 놓고 협상 중이어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는 많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주요국 총선결과에 따른 정권교체 가능성, 경기 회복을 주도할 성장 동력과 EU 내 리더십 부재는 언제든지 위기를 재점화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간의 긴축정책으로 그리스의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국민의 불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면 'Grexit'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여파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그리스 총선 당시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다국적기업들은 그리스 시장에서 현금 회수, 안전통화로 환전, 전면 철수 등 다양한 비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에 돌입하면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생산·유통관리 및 마케팅 전환, 친기업적 환경을 갖춘 인근국으로 이전, M&A를 활용한 전화위복 기회 발굴 등 유럽 소재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 진출기업들도 권역별, 국가별 상이한 특성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마케팅 및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장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 남유럽에서는 EU 재정적자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재정긴축이 지속되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중요한 구매 결정요소로 작용하여, 중저가, PB, 'Cheap-Chic' 컨셉 아이디어 상품 등 불황형 상품으로 남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브랜드파워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문제로 저평가된 우량 중소기업 매물 증가,

그리스 등의 민영화 등으로 인해 M&A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유럽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실업구제제도 강화로 더디지만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수입수요 감소세가 포착되고 있으나 전자응용기기, 기계요소, 플라스틱 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위기와 원화 강세를 틈타 작년에 이어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확보하려는 M&A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주 상태가 양호한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과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진출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경우, 공산품에 편중된 對영국 수출구조를 IT, 의류, 생활잡화 등 일반소비재로 확대하고, 탈EU 정책기조를 감안해 만약의 시장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U 내 수입수요 감소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동유럽 전역에서 내수 감소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폴란드는 탄탄한 내수, 즈워티화 약세, EU기금 수혜로 유일하게 경기 안정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유럽 생산기지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시장 전반에서 유럽 재수출용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에 우리기업 수출기회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폴란드는 원자력, 풍력, 셰일가스, 헝가리는 바이오매스, 체코는 ICT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진출 기회를 엿봐야한다.

북유럽은 그동안 건실한 정부 재정과 금융안정,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으로 재정위기 안전지대였으나,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긴축을 실시하고 있어 더 이상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내수가 안정된 핀란드에서는 스포츠용품과 개인용 디지털 가전, 미용기기 수출과 열병합발전, 바이오매스, 수처리 등 클린테크 분야의 기술투자가 유망하다. 풍력에너지 강국인 덴마크에서는 플렌지, 롤러베어링, 기어박스 등 풍력발전용 부품 수출과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주도로 셰일가스 채굴 산업이 육성되고 있어, 항공 기술 부문의 협력 기회와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 유럽재정위기 현주소

1. 재정위기 발생 원인 및 진행 현황

□ 발생 원인

- (외부요인)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악화
 -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로 유럽은행 부실화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및 부실은행에 대한 재정 지원 여파
- (회원국 자체 문제) 방만한 재정운영 및 경쟁력 약화
 - 경기부양에 따른 방만한 재정지출로 정부부채 급증 및 '부채의 덩어리' 현상
 - '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경쟁력 약화로 인한 역내 불균형 심화
- (유로존의 구조적 한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분리
 -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시행, 재정정책은 국별 운영
 - 강한 금융연계로 위기 전이 속도는 빠른 반면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국 간 재정정책 합의 도출이 어려움.

□ 진행 현황

- PIIGS 국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해지자 구제금융 신청
 - 그리스 1,100억 유로('10.5) 이후 2차 구제금융 1,090억 유로('11.7.21)¹⁾ 신청
 - 아일랜드 850억 유로('10.11), 포르투갈 780억 유로('11.5)
 -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대두되면서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점증
-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의 피해가 주변국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확산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권 국가 경제성장 둔화
 - 유럽시장의 생산기지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지역 또한 재정 위기의 타격이 불가피

1) '11.10.27일, 1,090억 유로에서 1,300억 유로로 확대

2. 재정위기국의 주요 현안 이슈

가. 그리스

□ 구제금융 지원 재개 협상 타결

- '12.6월 총선 이후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인 재정긴축 이행에 대한 의문 증폭
 - '12.5월 2차 구제금융 2회분 10억 유로 이후 지원 중단 상태
- 추가 긴축으로 트로이카²⁾와의 협상 타결, 구제금융 지원 재개 임박
 - (그리스) 정부지출 115억 유로 축소, 20억 유로 증세를 통해 135억 유로 긴축 합의
 - (트로이카)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당초 2014년에서 2016으로 연장(GDP 대비 3% 미만으로 감축)

□ 추가 긴축방안에 대한 그리스 의회 및 유로존 승인 필요

- '12.11.8일 그리스 의회가 추가 긴축안을 승인, 11.11일 이를 포함한 2013년 예산안 의회 통과
- '12.11.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와 EU 측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 11.26일 재회동 예정
 - 유로존 그리스 구제금융안 승인시 2차 금융지원 재개

□ 추가 긴축 총파업에 대한 반발과 불안 수습이 과제

- 누적된 경제적 고통에 추가 긴축 추진으로 국민들의 불만 최고조
 - 채권단과 협상 재개 이후 공공(ADEDY)와 민간(GSEE) 양대 노조와 개별 직업군(경찰, 법관, 의사, 간호사, 지하철, 버스 등)들의 추가 긴축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2)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나. 스페인

□ 유럽중앙은행의 전면적 통화정책(OMT³⁾) 발표로 자금조달 여건은 개선

- '12.9.6일 ECB의 국채시장 개입 계획 발표 이후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정부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현재 5%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나 사상 최고치인 7%를 돌파했던 금년 여름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수준
-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와 안도감이 반영된 것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금리 반등 우려

□ 스페인 정부, 구제금융 신청 시기 저울질

-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했다는 예상과는 달리 스페인 정부는 동 조치가 '12년 내에는 필요 없다는 입장
- 라호이 총리는 10.29일 즉각적인 구제금융 필요성을 일축하며 '스페인의 국익'에 부합할 경우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
-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 요청을 최대한 늦추며 신청 시 부과될 이행조건의 최소화해 주력할 전망
- 이행조건으로 수반되는 연금, 의료 부문 등에 대한 긴축은 집권당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재정위기로 인한 국민 갈등, 지방정부와의 반목 해소 필요

- 세금인상, 복지 축소를 포함한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과 고용 악화에 따른 국민 불안 고조
-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50%를 넘기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3)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

- 카탈루냐주 분리독립 움직임 등, 지방정부와의 갈등 가시화
 - 자치주 재정 악화에 따른 분리독립주의 확산으로, 카탈루냐주의 경우 '12.11.25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CiU 정당의 압승(2/3 의석차지) 전망
 - EU는 회원국의 일부가 일방적으로 분리 독립할 경우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카탈루냐주가 별도로 EU가입을 신청해도 스페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다. 이탈리아

□ 몬티 정부의 개혁정치로 위기 진화 청신호

- 고질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긴축, 개혁 조치로 긍정적 효과
 - '11.11월 디폴트 기준(7%)을 넘어 7.26%를 기록한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몬티 총리 취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2.10월 4%대로 안정
 - 수출의 경우 지난 8월,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주력산업(식품, 제약, 제조업, 화학 산업 등) 전반에 걸쳐 EU 국가들을 상대로 고른 무역흑자를 나타낸 것에 주목
- 자체긴축과 금융 개혁으로 구제금융 없는 경제회복에 자신
 - 자체적으로 충분히 위기 대응이 가능하며 당분간 이탈리아가 구제금융 신청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 그러나 구제금융의 필수 대가인 긴축재정 수위나 내용이 불확실한 가운데 스페인과 눈치작전 중이라는 해석

□ 마리오 몬티 총리의 연임 여부

- 몬티 총리 주도의 세금인상, 연금·노동법 등 강도 높은 개혁으로 노동계 반발, 취임 당시 70%대 지지율은 현재 40%대로 하락
 -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구제금융 없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4월 총선에서 몬티 총리 연임은 필수적임.

- 몬티 총리의 연임 실패에 따른 향후 전망 상이
 - 유럽안정화기구(ESM)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 등, 방화벽이 구축되어 급격한 국채금리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반면, 몬티 총리의 부재로 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경우 국채 금리상승과 함께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재정위기의 3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 상존

3.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방화벽 구축

□ 유럽 신재정협약 체결('12.3)

- (내용) 재정균형 달성 목표를 회원국 헌법에 명시하며 위반 시 제재
 - '13년까지 재정적자 GDP의 3% 이내, 공공부채 GDP 60% 미만 유지를 통한 재정균형 달성을 법제화
 - 목표 위반 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GDP의 0.1%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ESM으로 편입
- (진행현황) EU 27개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서명
 - EU 조약 개정이 아닌 정부 간 협약 체결로 12개국 비준 시 발효(당초 9개국 비준 요건을 12개국으로 강화)
 - 체코는 국내 긴축반대 여론을 이유로, 영국은 금융 부문을 예외로 하자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협약 서명을 거부
- (의의) 유로존의 재정통합을 위한 기틀 마련
 - 동 협약은 회원국의 예산 수립 및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EU 집행위의 개입 권한 강화
 - 제재조항이 없어 유명무실 했던 과거와 달리,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각 회원국에 강제성 부여, 재정적자 폭 심화 사전 예방에 주력

□ ECB의 전면적 통화정책(OMT) 도입('12.9.6)

- (내용) 위기국의 만기 3년 미만 단기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국제금융 체재
 - 기존 국채매입프로그램(SMP⁴⁾) 대체 조치로 신청국의 경우 ECB의 긴축 요구안 수용 등 엄격한 전제조건이 수반되며 불이행시 국채매입 중단
- (의의) 위기국 국채 매입을 통한 금융지원 및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재 구축
 - 국채 매입에 따른 유동성 흡수를 위한 불태화 정책(sterilization)⁵⁾, 디폴트 시 우선변제권 포기⁶⁾ 등, 전면적 국채매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위기국들이 단기적 국채 상환불능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 마련 및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운신의 폭이 확대됨.
- (한계점) 위기국의 국채 금리 안정이 기대되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
 - 위기국의 국채금리 급등시 SMP로 시장개입을 단행, 국채금리 안정에는 성공했으나 임시방편에 그친 만큼 OMT가 지속적인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
 - 결국 통화정책에 불과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선,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수

□ 유럽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출범('12.10.8)

- (내용) '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⁷⁾를 대체할 상설기구로 국제금융 혹은 국채매입 방식으로 위기국 지원
 - 자기자본금 7,000억 유로, 5,000억 유로까지 대출 가능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국가별 분담 비중이 높음.

4) Securities Market Program : '10.5월 처음 도입하여 '12.2월 중단

5) Sterilization : 국채매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것으로 통화량 증가만큼 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대응

6) OMT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시 우선변제권을 포기, 민간투자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손실을 감수 한다는 입장

7)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10.6월 설립

- (의의) 재정위기에 따른 유동성 불안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
 - OMT와 함께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에 봉착한 회원국에 유동성 공급
- (한계점) 가용자금 확충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
 -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전면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경우 재원 부족 예상
 - 2014년 말 만기도래 예정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부채 규모는 각각 2,750억, 5,390억 유로로 ESM의 대출한도 초과

□ 유로존 시중은행 통합관리체제 출범 합의('12.10.18)

- (내용) 유로존 17개국 내 시중은행(약 6,000여개)에 대한 감독 권한을 ECB에 부여 하는 등, 단일 감독체제 도입
 - ESM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시중은행에 직접 자금 지원 가능
 - 올해 말 제도적 장치 마련, '13.1월 정식 출범을 통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계획
- (의의) 단일 감독체제 구축으로 은행부실이 해당국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
 - 향후 유로존 공동 예금자보호, 부실은행 워크아웃 및 정산체제 도입으로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향한 행보 가속화 가능
- (한계점) 유로존과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 적지 않은 진통 예상
 - 통합감독기구 설립 찬성 진영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로 EU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동맹이 필요하다는 입장
 - 독일의 경우 이에 앞서 부실은행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다소 상이한 입장 견지
 - 영국을 위시한 비유로존 국가들은 ECB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
 - 영국은 은행통합으로 EU내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 약화 우려
 -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자국 부실은행이 ECB 감독권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

II 유로존 전망 및 예상 시나리오

1.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 위기확산 차단책이 연달아 구축되면서 시장 기대감 상승

- OMT 도입, ESM 출범, 은행통합관리체제 등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벽 구축에 일단 긍정적 평가
- 경기 전환점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회원국 국채 및 증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세

□ Grexit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유로존 안정화에 대한 관심 고조

-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결정, 독일 및 프랑스 정부의 Grexit⁸⁾ 가능성 일축으로 유로존 붕괴 등, 극단적 상황 발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미
-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 구제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며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독일은 전제조건 없는 채무기한 연기나 추가 구제금융은 가능한 한 방지한다는 입장 고수

□ 향후 재정통합 진전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신뢰 회복 가능

- 근본적인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의 재정통합이 필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
- 향후 재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경우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재정위기 봉합 및 추후 유사 위기 예방 가능

8) Greece+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EU 탈퇴 의미

- 경기부양책 미비, 일부 회원국 내 정치적 갈등 등 잠재적 위협요인은 상존
 -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에 돌입할 수 있는 각종 조치가 마련되었으나 안심하기에는 시기상조
 -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비심리 등, 실물경제의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우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상황 주시 필요
 - 이탈리아(13.4), 독일(13.9) 등 주요국 총선 결과에 따른 정권 교체 및 긴축에 대한 입장 선화, 국내 여론 악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악재로 작용할 변수는 상존
 - 경기부양을 위한 성장동력 부재는 위기극복의 걸림돌로 작용
 - 역내교역 비중 높은 반면 긴축정책의 여파로 내수 회복은 부진, 전체적인 경기 회복을 주도할 원동력 부재
 -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채 감축 뿐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성장산업 발굴, 산업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 병행 필요
 -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EU내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 EU 경제의 투톱인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긴축,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위기 해법 방식에 대한 이견 존재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회원국 사이의 정책공조 및 신속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으로 리더십 부재가 위기 재점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제기
 - (그리스) 극심한 경기침체로 반긴축 정서가 부상하는 가운데, '12.6월 총선에서 급진좌파 연합이 득세하면서 유로존 탈퇴 우려가 대두
 -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탈퇴 시 다음 순서로 재정상황이 취약한 두 국가의 탈퇴 가능성이 부각
 - (핀란드) 8.17일, 투오미오야 외무장관은 핀란드가 재정취약국의 부채를 떠맡으면서까지 유로를 고수하지 않을 것이며, 유로 해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는 입장 발표

2. 유로존 예상 시나리오

가. 그리스 유로존 잔류

☐ 잔류 근거

- 긴축조치 수용 및 2차 구제금융 지원으로 디폴트 위험은 당분간 배제
- OMT, ESM, 은행동맹 등, 위기국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책 강화
- EU 회원국들, 그리스 탈퇴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비용 부담 우려로 그리스 잔류에 무게
 - 독일 경제연구기업 프로그노스(Prognos)에 의하면, 그리스의 EU 탈퇴는 그리스 GDP의 1,640억 유로 감소, 독일의 경우 730억 유로, 세계 주요 42개국에서는 6,740억의 경제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산
- 유로존 회원국 강제 탈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자발적 탈퇴 가능성은 희박
 - 탈퇴 시 드라크마화 복귀와 함께 화폐가치 폭락, 수입품 부족, 물가 폭등 등의 경제·사회적 혼란과 국가 이미지 하락 불가피
 - 그리스 국민의 80%가 유로존 탈퇴에 반대하며 최대 야당인 급진좌파연합(SYRIZA) 역시 긴축은 반대하나 유로존 잔류를 주장

☐ 잔류 시 파급 효과

- 그리스가 긴축에 실패하거나 향후 추가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질서 있는 디폴트'⁹⁾후 유로존 잔류 추진 가능

9) ordered default : 그리스 파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고, 그리스를 디폴트 시키는 것

- 그러나 이 경우 ECB와 회원국들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 실현 가능성은 낮음.
- 그리스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지속에 따른 유로존 잔류
 - 독일 경제 주간지 Wirtschaftswoche에 따르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시 '20년까지 긴축정책과 EU 차원의 재정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 관점에서 긴축정책과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과 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나. 그리스 유로존 탈퇴

□ 탈퇴 근거

- 긴축정책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디폴트 후 유로존 탈퇴가 오히려 그리스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와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사회 불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극단적 처방 부상
 - 디폴트로 인한 화폐 평가절하가 임금, 연금 삭감의 긴축보다 고통이 적으며 이를 통한 부채가치 하락, 수출가격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긴축정책 미흡 및 경기침체 확대에 따른 추가 구제금융 요인이 발생, 그리스에 대한 지원 입장 변화도 변수
 - 긴축효과 미흡,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구제금융 금액이 매년 예산을 초과하면서 회원국 부담 심화
 - Goldman Sachs는 '13.9월 독일 총선이 큰 변수로 작용하되 총선 이전 탈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

□ 탈퇴 시 파급 효과

- 그리스 탈퇴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그리스 경제 붕괴, 유로화 이미지 타격, 유럽 내 사회 및 정치 불안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
 - (그리스) 유로화 예금에 대한 대규모 뱅크런, 드라크마 가치 급락, 초인플레이션, 은행 및 기업 연쇄도산, 실업률 증가, GDP 급감 및 내수 침체 등의 파장 극대화
 - (EU) 재정취약 주변국 추가 이탈 발생과 EU 중심국의 손실 확대 여파로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 1958년 유럽공동체 설립 후 유럽통합 과정의 첫 번째 실패 사례가 될 전망
 -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등, 회원국 확대와 단일통화 채택으로 단일 블록을 구성 및 강화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에 대한 재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

III

위기 장기화에 따른 기업 대처 유형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에 대비한 다국적 기업들 비상대책

- '12년 5~6월 그리스 총선 이후 유로존 사태가 악화되자 만약에 있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
 - 기업별로 공개된 부분은 제한적이나 국내외 언론 보도를 통해 다양한 대처방안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
- 현금 회수 및 보유 자금 리스크 분산
 - 하이네켄, 디아지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그리스 시장에서 현금 자산 회수
 - 여유자금은 미국 달러화나 영국 파운드화 등 안전통화로 전환
- 현금 회수문제에 대한 우려로 시장 철수
 - '12.6월, 유럽최대 프랑스 소매유통기업 Carrefour사는 그리스 합작사 Carrefour-Marinopolis 지분을 Marinopolis사에 2억 2천만 유로에 모두 매각하며 철수 발표
- 그리스 및 재정위기국 예금 이탈 현상에 대비한 현지 시중은행의 예금확보 전략
 - 그리스 ATE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규 지점 개설
 - 스페인 La Caixa사, 신규 계좌 개설시 22인치 평면 TV 제공
 - 네덜란드 ING사, 즉시 인출 가능 능력 강화, 3.3% 이자 지급

1. 재무건전성 제고

□ 금융권의 투자은행(IB) 기능 축소 및 부실은행간의 통합

- '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투자은행 규제 및 자기자본 확충 요구에 상응하기 위해 IB 부문의 조직과 인력 대폭 축소
 - Deutsche Bank(독일), '12.8월 IB분야 1,500명 감원 계획
 - Crédit Suisse(스위스), IB 부문 중심으로 2,000명 감원 계획(총 직원의 4%)
 - Lloyds TSB(영국), '11.6월 15,000명 감원 계획 발표
- 부실자산매각을 통한 자산건전성 회복에 노력
 - Société Générale(프랑스), 그리스 자회사 Geniki 은행 매각
(‘04년 인수 이래 약 10억 유로 손실)
 - Crédit Agricole(프랑스), 그리스 자회사 Emporiki 은행 매각
(‘06년 22억 유로에 인수해 약 100억 유로 손실)
 - Bankia(스페인), 1,100개의 보유 부동산 저가 처분
 - 그리스 국립은행(NBG), Eurp Bank, Alpha Bank, Piraeus Bank, Emporiki Bank 등 부실 은행 간의 통폐합 진행 중

□ 제조업, 유통업의 '몸집 줄이기'로 장기 불황 대비

-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는 생산라인 폐쇄 및 인원 감원
 - Ford, '14년 말까지 영국 사우스 햄튼, 벨기에 헝크 공장 폐쇄
 - Peugeot-Citroen(프랑스/자동차), '14년 말까지 센 생드니 공장 폐쇄, 8,000명 감원
 - Opel(독일 · 미국/자동차), 영국 엘즈미어 포트와 독일 보훔 공장, 벨기에 안트베르펜 공장 폐쇄 예정
 - Nokia(핀란드/IT), 루마니아 공장, 핀란드, 독일, 캐나다 R&D센터 폐쇄, 헝가리 공장 감원
 - Panasonic(일본/전기전자), '12년 말까지 체코 자테츠 공장 생산 중단, 590명 감원

- 유통체인망은 판매점 축소, 폐쇄
 - Argos(영국/생활잡화), '14년까지 런던 내 모든 매장 폐쇄, 온라인으로 전환
 - Metro(독일/전자제품), 헝가리 내 고급라인 제품 판매매장 Saturn 폐쇄, 중저가 제품 판매 매장인 Media Market만 운영

2. 생산 유통관리, 마케팅 전략 전환

□ 내수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및 유통관리

- Fiat, 유럽 역외 수출로 유럽시장에서의 매출 만회
 - 유럽 공장 생산량의 15%를 자동차 수요가 비교적 높은 북미, 브라질, 중국시장으로 수출하여 급락하는 유럽시장에서의 매출을 만회
 -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을 비롯한 다양한 자동차 부품의 EU 역외 시장 개척
- Ford,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럽내 공장별 생산 재조정
 - '11.6월 Ford사는 불황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영국, 벨기에 공장은 임시 폐업하고, 스페인 발렌시아 공장의 제조 물량을 늘릴 계획
 - 독일 중심의 생산체제에서 전환, 스페인과 루마니아 공장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공장을 전문화 할 것으로 보임.
- 스페인 대형백화점 체인기업 El Corte Ingles, 도심 중심가에 소형 익스프레스 매장 확대
 -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실적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어, 수익모델 다각화, 소비자들과의 접점확대를 위해 도심형 소형매장 'Superior Express'를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
 - '11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익스프레스 매장을 확대하여 '12년 말까지 매장 수를 50개까지 늘릴 방침

□ 가격인하 마케팅으로 소비자 유도

- Opel, 스페인 정부의 지원보조금에 힘입은 가격할인 마케팅으로 10일 만에 자동차 주문 전년 동기대비 150% 증가
- 스페인 정부는 '12.10월부터 '13.3월까지 고효율 신차 구매 시 2,000유로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¹⁰⁾
- 오펬은 상기 보조금에 최대 4천 유로의 가격할인을 추가해,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를 총 6,000 유로의 할인을 받으며 초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시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를 유도

3. 위기국 탈출

□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인근국가로 이전

-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피해 본사를 인근국가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는 親기업 감세정책으로 주요 이전 대상국으로 선정
- 스위스는 영업이익의 12~19%만 세금으로 부과해 이탈리아(68%)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세금 부담이 낮은 편
- 또한, 생산기지를 스위스로 이전하는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10개의 일자리 창출 시 5년간 세금이 감면되는 등 사업 환경이 뛰어나.
- 그리스 최대 상장업체 코카콜라 헬레닉(CCHBC)¹¹⁾은 본사를 스위스로 이전하고 '12.'10.11일 공시를 통해 영국 증시 상장
-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조치로 인해 높아진 세금과 불안정한 그리스 조세제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10) Plan VIVE : 연식 12년 이상 자동차 소비자(상업용 차량의 경우 연식 10년 이상)가 정부에서 지정한 에너지 소비 효율성이 높은 신차 구매 시 정부와 자동차 제조 기업이 각각 1천 유로씩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총 2천 유로 지원

11) 시가총액 76억 달러, 그리스 시장은 전체 매출의 5%

- 이탈리아 나사 전문 생산기업인 코스타토(Costato)사도 스위스로 본사 이전 검토 중
- 이탈리아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높은 법인세를 감당하지 못해 스위스로 이전하는 현지 기업이 약 300여 개사에 이르며, 그 중 금속·기계분야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M&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

□ 재정위기 속 유럽에 부는 M&A 바람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축된 후 '10년부터 회복세
- '11년 거래 건수와 규모는 2,093건, 약 1,722억 달러로 '09년 대비 각각 56.9%, 48.2% 대폭 증가¹²⁾
- 미국, 중국, 일본 등 역외기업의 유럽기업 인수가 역대거래에 비해 급증
- 유럽 매출 증가 및 매출가격 하락과 중국, 일본 중심의 풍부한 자금력 보유
- 부실은행의 자산 매각, 기업 자금난 심화, 공기업 민영화 등 매출 증가 전망

□ 한·중·일의 유럽기업 M&A시장 공략 강화

- (중국) 유로화 약세와 높은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11년 유럽기업 M&A 건수는 전년 대비 76% 급증(25건→44건)
- 국영기업, 국부펀드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전력 및 에너지, 유틸리티를 비롯한 인프라 분야 대규모 투자 활발
- 저가 제품의 대명사로 전락한 Made in China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제조업(완성차, 가전제품 등)과 소비재 부문(패션의류 등)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기술 및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유럽 기업을 집중 매입

12) UNCTAD(World Investment Report 2012, Net Sales) 기준
'09년 1,334건 1천162억 달러 / '10년 1,796건, 1천159억 달러

- (일본)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엔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 신규수요 발굴, 첨단기술, 브랜드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 증가 추세
-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저조하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증가 추세
 - 최근 대형 M&A는 정부기관·기금의 지분인수, 부동산 투자가 상당수 차지
 - 전통 있는 브랜드나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이탈리아 및 프랑스 패션 분야(의류·피혁 등) 기업 인수 증가

<한·중·일의 유럽기업 주요 M&A 사례>

	인수업체	인수대상업체	분야	금액	시기
중 국	Geely Automobile	Volvo(스웨덴)	완성차	18억 달러	2010.3
	Lenovo	Medion(독일)	컴퓨터·가전	6.7억 달러	2011.6
	창장싼샤그룹	EDP(포르투갈)	에너지	35.1억 달러	2011.12
	중국석유화학공사	Petrogal Brasil(포르투갈)	석유시추/개발	52억 달러	2012.2
	Shig-Weichai그룹	Ferretti(이탈리)	고급요트	4.8억 달러	2012.1
	중국 전력공사	REN(포르투갈)	전력	5.7억 달러	2012.2
일 본	다케다 제약	Nycomed(스위스)	의약품	140억 달러	2011.5
	도시바	Landis+Gyr(스위스)	스마트그리드	23억 달러	2011.5
	테루모	Cardian BCT(스웨덴)	의료기기	26.3억 달러	2011.3
	미쓰비시상사	Anglo-American(영국)	광산운영	53.9억 달러	2011.11
한 국	한국석유공사	Dana Petroleum(영국)	석유 탐사	27.9억 달러	2010.7
	국민연금	베를린 소니센터(독일)	부동산	7.7억 달러	2010.4
	이랜드	Lario 1898, Belfe, Mandarin Duck, Coccinelle(이탈리), Peter Scott(영국)	의류, 잡화	미공개	2010 ~ 2012
	LG패션	Alegri(이탈리)	남성의류	미공개	2011
	GS E&C	INIMA(스페인)	수처리	231억 유로	2011
	한화	Q Cell(독일)	태양광	0.4억 유로	2012.8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 Bloomberg, KOTRA 자료 및 언론 보도 종합

IV 권역별 경기 전망 및 우리기업 진출 방안

1. 남유럽

□ 2013년 남유럽 경제 전망

구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경제성장률(GDP 대비 %)	-6.0	-4.0	-1.5	-1.3	-2.3	-0.7
물가상승률(%)	1.0	-1.1	2.4	2.4	3.0	1.8
실업률(%)	23.8	25.4	24.9	25.1	10.6	11.1
재정적자(GDP 대비 %)	-7.5	-4.7	-7.0	-5.7	-2.7	-1.8
정부부채(GDP 대비 %)	170.7	181.8	90.7	96.9	126.3	127.8
신용등급(S&P)	CCC	Negative	BBB-	Negative	BBB+	Negative

자료원 :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2), S&P

- 연이은 긴축정책,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 위축, 高실업률 등 악재 산재
 - 각종 악재에 따른 경기침체에 이어 '13년 이탈리아 총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감축 실패 등, 긴축과 성장의 딜레마에 봉착
 - 역대 최고 실업률과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생산 저하 및 수출입 위축 예상
- EU 재정적자 목표 준수를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지속
 -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회복을 통해 국채금리 안정과 외국자본 이탈 방지에 주력할 전망
 - 그러나 이를 위해 세율 인상, 공공부문 감원,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 등이 불가피, 가계 가처분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
- 채무상환능력 확보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성장정책 병행 추진이 관건
 - 노동시장 및 경제구조 개혁 없는 불황 타개는 요원하므로 향후 경기 부양책이 도입될 지에 관심

□ 그리스

- (수출) 실용적 저가제품, 소량 현지구매 선호
 - 급여, 연금 삭감, 세금인상으로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실용적이면서 가격은 저렴한 저가브랜드, PB 제품 선호
 - 판매부진과 재고부담으로 대량수입을 지양하는 한편 재고관리가 용이하며 납기가 빠른 현지조달 선호
- (투자)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에 따른 M&A 시장 활성화
 - 그리스 정부는 현재 가스공사(DEPA), 석유공사(HELPE), 축구협회(OPAP) 등 약 40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중
 - 인프라 부문 투자를 통해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남동부 유럽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
- (신규사업 기회) 성장정책의 일환인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유망
 - EU 집행위의 NSRF¹³⁾ 기금으로 리조트, 부동산, 스포츠, 해양 관광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고용 창출, 경기 진작을 모색
 - 태양광을 비롯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주, 독일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이 필요

□ 이탈리아

- (수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소싱에 적극적인 이탈리아 기업 공략
 - 기본 유럽산 고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주요 수입 대상국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산 제품보다 가격은 낮지만 품질은 대등한 제품으로 시장 진출 모색
- (투자) 현지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직접투자

13)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 : 회원국의 개발을 통해 EU의 성장, 조화 촉진을 목표로 하는 EU 집행위의 결속 기금

- 유동성 위기로 저평가된 이탈리아 알짜기업들과의 사업협력이나 M&A를 통한 브랜드 혹은 디자인 자산 인수 기회 증가
- 특히 독창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움직임 확산
- (신규사업 기회) 혁신기술 보유기업과의 기술 협력 파트너십
 -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탈리아 강소기업과의 기술협력에 관심 필요
 - 단기적으로는 상품수출,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교역 및 공동 R&D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추진

<한국 M3사와 이탈리아 Sea Breath사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협력 사례>

- '12.7월 KOTRA와 이탈리아 총리실 산하 혁신위원회는 혁신기술 상담회 <Korea-Italy Innovation Day> 공동개최
- 국내 참가기업 M3사에 의하면, 파력발전에너지는 높은 설비비용으로 자본력이 강한 독일, 미국 기업이 아니면 시장진입이 어려움. 이탈리아 Sea Breath사의 시스템은 설치비용이 낮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여 기술 M&A를 추진하게 됨.

□ 스페인

- (수출) 절전형, Cheap-Chic 컨셉 등 아이디어 상품으로 불황기 틈새시장 공략
 - 전반적인 수입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불황형 상품 수요는 증가 추세
 - 불황 속에서도 현지 트렌드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 필요
- (투자) '11년 말 조기총선 실시로 보류되었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예상
 - 공항공사, 철도공사, 관광공사 등의 공기업 민영화 가시화
- (신규사업 기회)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제 3국 시장 진출
 - 스페인 경기침체 이후 현지기업들은 역사적·지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강한 중남미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강화
 -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으로 서어권 시장 진출 모색 가능

2. 서유럽

□ 2013년 서유럽 경기 전망

구분	독일		프랑스		영국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경제성장률(GDP 대비 %)	0.9	0.9	0.1	0.4	-0.3	1.1
물가상승률(%)	2.2	1.9	1.9	1.0	2.7	1.9
실업률(%)	5.2	5.3	10.1	10.5	8.1	8.1
재정적자(GDP 대비 %)	-0.4	-0.4	-4.7	-3.5	-8.3	-7.3
정부부채(GDP 대비 %)	83.0	81.5	89.9	92.1	88.7	93.3
신용등급(S&P)	AAA	Stable	AA+	Negative	AAA	Stable

자료원 :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2), S&P

○ 더디지만 꾸준한 성장흐름 예상

- 정부지출 축소와 세수 확대로 전방위적인 재정 긴축 실시
- 기준금리 동결¹⁴⁾, 자기자본 확충¹⁵⁾, 리보 조작¹⁶⁾을 비롯한 시장교란 행위와 내부 거래 형사처벌¹⁷⁾ 등 금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
- 경제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긴축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도모
- 한편, 잠재적인 위기 우려국으로 분류되던 프랑스는 장기적인 불황 전망

○ 국가경쟁력과 고용 증대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에 무게

- (프랑스)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투자은행 설립 등을 통해 신용 경색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에 주력
- (프랑스·독일) 직업훈련비 지원, 고용유형 다변화, 근무유연제 확대 등 실업구제 정책 강화로 노동시장 유연화 모색

14) '12.7월 유럽중앙은행(ECB)는 기준금리를 1.0%에서 0.75%로 내린 이후 동결 기조 유지

15) '11.10월 유럽은행감독청(EBA)은 '12.6월까지 유럽은행들에 대한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 이상으로 확충 요구. 이에 따라 은행권의 유상증자, 자산매각 및 신용축소 등이 진행중

16) EU 집행위원회는 '12.7월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와 유리보(유럽 은행간 금리) 등의 지표금리 조작

17) EU 27개 회원국 정부, 법인, 개인 등 대상으로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금액을 대폭 높이고 필요 시 최소 2~5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개정안 통과

□ 독일

- (수출) 하반기 경기 둔화 움직임에도 일부 품목의 수출 견조
 - 전반적인 유럽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세가 포착되고 있으나, 전자 응용기기, 기계요소, 플라스틱 제품, 무선통신기기 등에서는 수출 강세
 - 다만, 원화 강세에 대비해 결제통화 다변화, 현금 자산 확보 내지 가격 조정 등을 통해 단기 및 중기적 환리스크 최소화 필요
- (투자) 재정위기에 따른 M&A 투자 활발
 - '11년 한국의 대독 M&A 투자 5년 이래 최대 규모 기록 이후 '12년에도 투자 활발(한화, 성우 하이테크 등)¹⁸⁾
 - 유럽 재정위기와 원화 강세를 역이용해, M&A를 통해 단기간 내 기업 규모와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
- (신규사업 기회) 전기자동차 분야 기술 협력
 - 독일 정부는 제 2차 전기자동차 개발 목표¹⁹⁾를 설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전망
 - 전기저장기술(배터리), 구동기술(모터), 차량, ICT 및 생산기술 등 기술 개발 협력 및 공동투자 모색 가능

□ 프랑스

- (수출)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 건축자재 산업은 회복 기대
 - '11년 3,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 침체기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
 - 반면, 수주상태가 양호한 항공기 및 철도차량 산업과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선전 예상

18) 성우 하이테크(주) : Weser-Metall-Umformtechnik 인수('12.6)

한화그룹(주) : 태양광 기업 Q-Cell 인수 ('12.8)

19) '20년까지 최소 10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일자리 3만개 창출 목표 : '13년까지 R&D부분에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교통정책 및 규제기준의 통합, 차량 및 배터리 안전성, 재활용 등에 대한 지속적 개발 추진

- 특히 건설 부문의 경우 기존주택 에너지절약과 서민아파트 건설비중 쿼터제 정책²⁰⁾ 추진으로 소폭 상승 전망
- 이중창 등 방한, 방열용 건축자재를 비롯해 삼, 마와 같은 천연소재 건축자재의 수요 증가 예상

<S&P에 이어 Moody's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 Fitch를 제외한 3대 신용평가기관이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
 - '12.1.13일, S&P : AAA(최고등급) → AA+로 1단계 강등
 - '12.11.20일, Moody's : Aaa(최고등급) → Aa1로 하향 조정
 - Pitch : AAA(최고등급) 유지
- (원인) 유로존 재정위기로 프랑스의 구조적 문제점이 심화되어 경기 회복 능력이 취약
 -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의 경기 악화로 재정 건전성 취약
 - 실업률 증가 등 시장 경직성 심화, 산업경쟁력이 점진적으로 저하
- (전망 및 평가)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프랑스까지 전이되었다는 평가
 - 신용평가 3사 모두 프랑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신정부의 구조 개혁이 지체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투자)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기대
 - 실업난 해소를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투자 진출기업의 활동 여건은 점차 개선될 전망
- (신규사업 기회) 환경 분야 선진국으로 청정기술 분야 협력 모색 가능
 - 프랑스는 수자원 관리, 폐기물 처리 면에서 전통적인 강호기업 다수 보유
 - 우리나라도 관개배수 기술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농업용수 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기술 노하우 전수, 공동 연구개발 가능

20) 올랑드 신임대통령의 선거공약(100만 세대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과 50만 서민주택 건설 5개년 계획)으로 모든 지자체 내 서민용 아파트 비중을 20%로 확대, 의무화

□ 영국

- (수출) 공산품 중심으로 편중된 수출품목 다변화
 - 기계 및 부품류에 집중되어 있는 對英수출 구조를 IT, 의류, 생활잡화 등 일반소비재 제품군으로 확대
 - 성능에 대한 홍보 강화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되도록 하나만 구입하려는 소비심리를 파악해 제품의 범용성 또한 강조
- (투자) 영국의 반EU 정책기조 고려해 시장리스크 대비책 마련 필요
 - 영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230여개의 법률과 규약을 EU로부터 환수하는 등 독자적으로 규정을 설정하고 시행 중
 - 영국은 EU와 달리 작은 정부와 시장개입 최소화를 지향, 외국기업 진출 시 타 EU 국가와 상이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영국의 EU탈퇴 시 닥칠 시장리스크에 대응방안 사전 모색 필요
- (신규사업 기회) 해상풍력 보조금 삭감, 전력, 플랜트 산업에는 기회
 - '10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붐으로 인한 과잉투자와 '12.7월 정부지원 보조금 삭감계획이 발표되면서 신규사업 취소 등 투자 감소 현상 심화
 - 한편, 발전량 대비 부족한 송전망 구축을 위해 영국 정부는 해상송전 설비 임대운영권을 공개 입찰하는 등, 송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

3. 동유럽

□ 2013년 동유럽 경제 전망

구분	폴란드		헝가리		체코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경제성장률(GDP 대비 %)	2.4	2.1	-1.0	0.8	-1.0	0.8
물가상승률(%)	3.9	2.7	5.6	3.5	3.4	2.1
실업률(%)	10.0	10.2	10.9	10.5	7.0	8.0
재정적자(GDP 대비 %)	-3.4	-3.2	-2.9	-3.7	-3.2	-3.0
정부부채(GDP 대비 %)	55.1	55.3	74.0	74.2	43.1	45.0
신용등급(S&P)	A-	Stable	BB+	Negative	AA-	Stable

자료원 :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2), S&P

- 비유로존 국가이나 유럽의 생산기지, 역내 무역의존도로 재정위기의 영향권
 - 폴란드와 체코는 재정위기가 안정화, 헝가리는 가입조건 미충족으로 당분간 유로존 입성이 지연될 전망
- EU내 수입수요 감소, 정부 긴축정책에 따른 내수 감소로 경기침체 지속
 - (헝가리) IMF의 재정정자 감축 요구로 공공부문 지출 삭감과 다양한 세제 도입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재정긴축 계획을 3차례에 걸쳐 발표²¹⁾
 - (체코)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연금, 세금 개혁 등 긴축정책을 실현할 방침이어서 현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폴란드의 경우 탄탄한 내수, 즈워티화 약세, EU기금 수혜로 동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 안정
 - 2007~2013년 총 670억 유로에 이어 2014~2020년 735억 유로의 EU기금 할당이 유력시되면서 내년에도 폴란드 정부의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이 기대

21) 헝가리 정부는 6주 동안 3차례의 재정감축안을 발표 : 10.5일 1차 감축안(397억 포린트), 10.19일 2차 감축안(60억 포린트 추가), 11.19일 3차 감축안(90억 포린트 추가) 발표.

3차 감축안에서는 에너지기업 소득세 50% 인상, 공공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 온라인 도박세 신규 도입 등으로 2013년 총 856억 포린트(약 4억 달러)의 추가수입을 기대

□ 폴란드

- (수출) 유로존 재수출용 품목에 집중
 - 유로존 수출비중이 높으며 완성차·전기전자 제품이 수출 효자종목
 - 완성차·전기전자 부품소재 분야에 우리기업 수출가능성 높음.
- (투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유망
 - 철도, 도로, 공항, 발전(화석연료, 가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 중
 - 최근 포스코 건설이 크라쿠프시 쓰레기 소각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2억 유로 규모)를 수주
- (신규사업 추진) 에너지 개발 사업 붐에서 신규 사업기회 포착
 -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풍력발전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이지만 꾸준히 성장중
 - 또한, 유럽 최대(30%) 셰일가스 매장국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채굴권 확보 비용과 법인세(19%)는 동 분야의 사업성이 높음.

□ 헝가리

- (수출)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 헝가리 진출 확대 노려야
 - 국내 생산 완성차의 96% 이상이 대외수출용으로 헝가리 내수침체와 무관
 - '12.3월말 다임러 케치케메트 신공장 가동, 아우디(9억유로)와 오펠(4억 5천만 유로) 신규투자 결정으로 헝가리의 자동차 산업 규모 커질 전망
- (투자) 투자진출 환경 다소 난망
 - 정부 구조조정 계획인 셸칼만플랜 2.0²²⁾ '13년 재정긴축안 등 각종 조세

22) Széll Kálmán Plan 2.0 : '12.4.23일에 발표한 정부 구조조정 계획안으로 '11년도 셸칼만플랜 1.0을 대폭 수정. EU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을 위해 금융거래세(토빈세) 등 5가지 세제를 신설하여 2013년 세금의 종류가 50여개에 달하게 됨.

- 부담과 잦은 정책변경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세
- World Bank는 '13년 폴란드 비즈니스 환경지수를 46위('11)에서 54위로 강등²³⁾
- (신규사업 기회) 최적의 자연환경 조건으로 바이오매스 산업 유망
 - 헝가리의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비중은 EU 평균 3.2%를 상회하는 5%로 세계 6위
 -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이지만 EU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분담률 목표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주도로 집중 육성될 전망

□ 체코

- (수출) 완성차 및 부품부문,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급선 변경 수요 증가
 -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우리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체코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SKODA의 경우도 품질과 유리한 가격 조건을 겸비한 부품업체 발굴을 위해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
- (투자) 중동부유럽의 ICT산업 선두주자, 경기둔화에도 성장
 - '07년 이후 정부의 일관된 정책적 지원과 민간부문의 산학협력 활성화, 내수시장의 수요확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진출로 지속적인 성장세 구가
 - 전자정부, 초고속인터넷망, 이동통신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
- (신규사업 기회) 세계적 기술력을 지닌 항공우주산업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 기대
 - 체코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경험이 풍부, 동 분야 비즈니스 기회 확대 모색 필요

23) Doing Business : 헝가리 46('11)-> 51('12)->54('13)

4. 북유럽

□ 2013년 북유럽 경제 전망

구분	핀란드		덴마크	
	2012	2013	2012	2013
경제성장률(GDP 대비 %)	0.2	1.3	0.5	1.2
물가상승률(%)	2.9	2.3	2.6	2.0
실업률(%)	7.6	7.8	5.6	5.3
재정적자(GDP 대비 %)	-1.4	-3.9	-3.9	-2.0
정부부채(GDP 대비 %)	52.6	53.9	47.1	47.6
신용등급(S&P)	AAA	Negative	AAA	Stable

자료원 :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2), S&P

- 재정위기 안전지대였던 북유럽, '13년 경기 둔화 우려도
 -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 은행 건전성, 강력한 재정정치 수립²⁴⁾으로 EU 국가 가운데 가장 유연한 위기대처능력 과시
 - 그러나 재정위기 여파로 북유럽 대형기업 역시 잇달아 감원계획²⁵⁾을 발표하면서 경기침체 우려 제기
- AAA 등급 유지 위해 정부 예산삭감 및 세금 증액에 초점
 - 부가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연대세(부자증세) 도입으로 세수는 확대하고 사회복지 지출 감소로 재정긴축 실현
 - 그러나 지나친 재정긴축이 경기후퇴를 야기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방안도 모색
 -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 조기은퇴자 연금회수 등의 방안으로 민간소비 촉진

24)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80년대 금융자유화와 자산거품에 따른 후유증으로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금융/재정위기를 겪어, 사회복지제도의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정부지출 상한 도입 등 강력한 재정긴축 추진

25) 핀란드의 노키아, 핀에어, 덴마크의 칼스버그(주류), 베스타스(풍력터빈) 등 감원 계획 발표

□ 핀란드

- (수출) 큰 지출은 감소, 여가생활과 미용기기에 대한 지출은 꾸준히 증가
 - 경기불안으로 해외여행이나 대형가전 교체, 주택 구매 등 큰 지출은 회피
 - 스포츠 용품(스키, 조깅, 요가 등)이나 개인용 디지털 가전(게임기,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 헤어드라이어, 피부 마사지기 등 개인용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
- (투자) 새로운 북유럽 투자진출 거점으로 부상
 - '11년 금융투자가 2년 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유로존 위기로 핀란드의 건실한 경제구조가 부각되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
 - 유로화 약세로 인근 비유로존 북유럽 국가 대비 물가가 현저히 낮아 북유럽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은 전초 기지로 고려 가능
- (신규사업 기회) 핀란드 기업의 EU 역외국 진출 활발한 가운데 클린테크 분야 유망
 - 핀란드의 열병합, 바이오매스, 수처리 등 클린테크 시공·부품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 진출을 모색 중
 - 이들 기업은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가 미흡하여 해당 분야 한국기업과의 기술 및 업무 제휴에 대한 관심 고조
- 핀란드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감소
 - 탈퇴 비용이 잔류 비용보다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 중 하나로 불붙었던 핀란드 탈퇴 가능성은 낮아짐.
 - 그러나, '10.12일 지방선거로 EU에 회의적인 극우정당의 의석 비중이 높아져(5.4%→12.3%) 예의주시 필요

□ 덴마크

- (수출) 풍력발전기 부품 납품기회 확대
 - 세계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기업인 VESTAS는 생산구조 전면 개편을 위해 글로벌 소싱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아시아산에 관심
 - 풍력발전용 부품(플렌지, 롤러베어링, 기어박스 등)은 한-EU FTA 수혜 품목으로 3.0~8.0%의 관세가 즉시 또는 3년간 철폐
- (투자) 셰일가스 개발 초기단계로 장기적인 관심 필요
 - '50년을 기점으로 화석연료 포기를 목표로 셰일가스 채굴 산업을 육성, '16년까지 시험채굴 진행 예정
 - 향후 셰일층의 가스 추출량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력 파쇄를 비롯, 착공 기술 부문 협력 기회와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규사업 기회) 풍력발전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
 - 풍력발전산업 선도국인 덴마크는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추진
 - 기어박스 교체 비용 절감 및 교체주기 연장 기술, 발전시간 단축을 위한 날개 디자인 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타진 필요

<끝>

작성자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과장
◆ 아테네무역관	주영도 과장
◆ 마드리드무역관	최숙영 차장
◆ 밀라노무역관	김태형 과장
◆ 파리무역관	김영호 차장
◆ 런던무역관	안지성 과장
◆ 바르샤바무역관	임태형 차장
◆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 과장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과장
◆ 헬싱키무역관	조재은 과장
◆ 코펜하겐무역관	남우석 차장
◆ 선진시장팀	이연주 과장
◆ 선진시장팀	진은주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2-067

유럽 재정위기 현주소 진단 및 우리기업 시사점

발 행 인 | 오 영 호
편 집 인 | 배 창 헌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